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기구 설치 합의

"2014년 지방선거때까지 전국 230여시군구 통합"

광역시·도 존폐 쟁점…민주 "합의된바 없다"

23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추진기구를 설치키로 함에 따라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특위가 밝힌 대로 내년 2월 국회에서 대통령 직속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법(가칭)'이 제정되면 정부 차원의 시·군·구 통합 계획이 마련되고 통합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제시되기 때문이다.

◇**개편법 내용**=우선 추진위 활동 시한과 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추진위는 자문기구가 아닌 법적 기속력이 있는 심의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활동 시한은 다음 지방선거인 2014년 6월 이전까지로 하되 추진위가 구성 후 1년 이내에 지자체별 통합 계획과 정부의 지원방안 등이 담긴 종합 기본계획서를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계획서에는 지자체별 통합 청사진과 행정·재정적인 지원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다만 지방행정체제 개편법에 개편 방향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할지 여부에는 이견이 있다.

여야는 3~4곳의 기초지자체를 하나로 통합, 전국을 광역단체 60~70개 정도로 재편하는 큰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이런 차원에서 법에 개편 방향까지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8개의 관련법도 대부분 광역시·도 존폐여부 등까지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달리 학계에서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광역단체는 통합하되 기초자치단체는 현재보다 더 쪼개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법에는 추진 일정만 담고 개편 방향은 추진위가 정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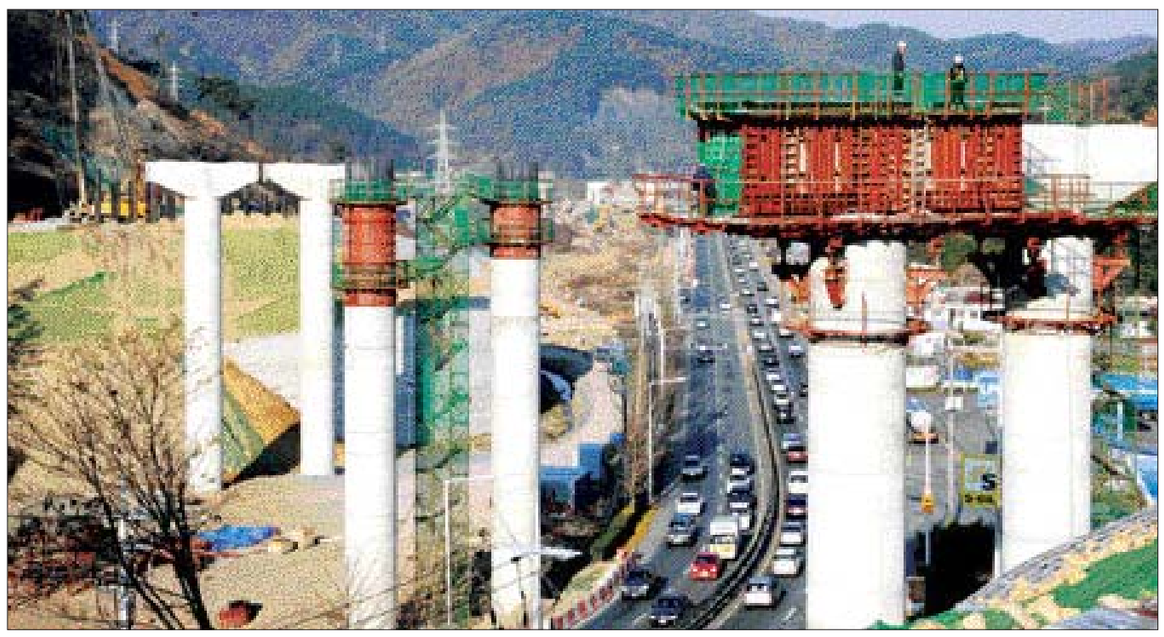
◇**쟁점은**=가장 큰 쟁점은 특별시·광역시와 도 존폐 문제다. 특위에서는 광역시·도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축소하자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폐지 주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이견도 따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허태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은 연일 새로운 합의 사실을 언론에 내보내며 속도를 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최인기 의원은 합의된 바 없는 사실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최인기 의원은 23일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허 위원장의 발언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국회 특위에서는 오는 2014년 지방선거 전까지 행정체제개편 작업을 완료하도록 18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뤄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가 차원의 추진기구 설립에 대해 최 의원은 "특위 내에는 기구가 정말 필요한지, 또 필요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할지 아니면 총리 산하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를 한 바 없다"며 "필요성을 느끼는 목소리가 상당하지만 위원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25~27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에서 권역별로 공청회를 연 뒤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화순 국도 확장 교각 오는 2014년 완공될 광주~화순 간 국도 29호선 확장구간 도로 상판을 놓기 위한 25m 높이의 교각들이 하나 둘 세워지고 있다. 이 구간은 상습적인 교통지체지역이면서, 사고다발지역인 기존 너릿재 구간의 차량을 분산시키는 차원에서, 화순터널을 통해 이십곡리, 화순읍으로 이어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국내외 연구기관 22개 이전 정부 '세종시 수정안' 공개

기업과 연구기관이 새로이 들어서고 교육과 문화 등 자족기능이 크게 강화된 '세종시 수정안'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23일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내 연구기관 가운데 세종시 유치가 가능한 기관을 19개 정도로 보고 있으며, 해외 연구기관은 3개 정도 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국내 연구기관 19개중 경제인문사회 분야 16개 기관은 세종시 이전이 이미 결정돼 있으며 여기에 기초기술연구회, 국가핵융합연구소 제2캠퍼스,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고등과학원 분원의 설립 및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

해외연구기관으로는 국제백신연구소와 아태이론물리센터, 막스플랑크연구협회 등의 설립 및 이전을 검토중이다.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될 경우에는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연구소 등을 유치해 대규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검토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시에 첨단녹색기업을 유치해 세계적인 녹색기업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고가 지원되며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세종시내 글로벌 녹색기술기업과 녹색 연구개발(R&D) 센터가 들어서는 녹색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세제 감면 및 재정지원 등을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또 초기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 중등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자율형 사립 및 공립고, 특수목적고, 마이스터고 등 우수 고교를 유형별로 1개교씩 우선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유치에 대해서는 내달 초 특목고 체제 개편이 결정된 후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다양하고 품격높은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 아래 국립도서관과 아트센터, 국립세종박물관, 도시박물관 등 도시 단위 문화시설을 중앙공원과 호수공원 인근에 집적화해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무안 한중산단 '대통령 보고' 왜 빠졌나

하루전 갑자기 변경…누락 배경 놓고 논란

영산강 살리기 기공식 참석차 지난 22일 광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남도가 애초 건의하기로 예정돼 있던 무안 기업도시 한중국제산업단지 지원 건의안이 누락된 배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남도와 무안군 등에 따르면 전날 영산강 살리기 기공식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지역 정·재계 및 언론사 인사들과 가진 '지역경제 활성화' 간담회에서 시·도의 주요 현안이 이 대통령에게 건의됐다.

공식 업무보고가 아닌 오찬을 겸한 자리였던 만큼 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안 사업을 3건씩만 보고했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해상풍력산업 중심단지 건설 ▲포뮬러원(F1)대회 배후단지 조성사업 ▲호남고속철 무안국제공항 경유 등에 정부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전남도의 애초 보고 안에는 호남고속철 무안 국제공항 경유가 아닌 무안 기업도시 지원건의안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무안 기업도시는 정부 기업도시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8천억 원 규모의 중국 측 투자도 확정됐으나 5천~6천억 원 상당의 국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조성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국내 주요 투자사 한 곳이 '사업 철회'를 밝힘에 따라 자본금 감자나 청산까지 나오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이에 따라 이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한중산단에 대한 지원 약속을 이끌어내 조만간 열릴 예정인 중국 측과 우리 측 정부의 고위관계자 면담에서 성과를 거둘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은 보고 일정이 대통령 방문 전날 갑자기 바뀌었다. 무안 기업도시 한중산단이 빠지고 '무안공항'이 들어가는 바람에 무안군 측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변경 배경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도시를 놓고 얽혀 있는 지역 정치인들 간의 '파워게임'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청와대로부터 무안 기업도시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요청이 들어와 보고내용을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부산시 "여수박람회 성공 적극 돕겠다"

전남도·여수시와 협조·지원체계 구축 합의

전남도와 여수시, 부산시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손을 잡는다.

부산시는 24일 여수박람회 홍보관에서 전남도와 여수시 등 6개 기관과 함께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협정'을 체결한다.

이날 지원협정 체결을 위해 허남식 부산시장과 제종모 부산시의회 의장,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201신정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부산지역 각계 인사 120여명이 여수시를 방문한다.

허 시장 등은 협정 체결 후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들어설 여수 신항 지구를 둘러보고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로부터 준비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들을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방문이 박람회 개최지인 여수 등 전남지역에 알려져 지역을 초월한 동서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여수 세계박람회와 관련 국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패키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박람회와 연계 가능한 4대 강 물길 살리기 사업, 남해안권 발전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교통·투자유치·지역간 협력분야별로 20개 단위사업을 발굴해 2012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2 여수 세계박람회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을 주제로 2012년 5월12일부터 8월12일까지 3개월간 여수시 신항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